

감사결과

1. 총괄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자가 이를 집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국가와 사업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국가는 보조금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특정 사업자나 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중복하여 지급되거나 부정하게 교부·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하여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표 3]과 같이 개선사항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3] 감사결과 현황

(단위: 건)

합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건수	금액 (원)	인원										계	일반	시정 완료 (금액)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모범	
11										1		10	10					

2. 지적사항 주요 내용

가. 단체 선정 과정

1) 직장어린이집 선정(재위탁) 절차 부적정 **(통보)**

○ (판단기준) 보육법 제10조, 제14조 및 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외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❶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하여 재위탁은 계약만료 3개월 이전까지 최종 위탁자를 선정 ❷ 기존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재위탁 심사의 경우 정해진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심사기준”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재위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를 하도록 되어 있음.

○(문 제 점) ❶ 해양경찰청 및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기존 보조사업자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위탁 계약 체결기한인 계약 만료전 3개월을 경과하여 처리하였고 ❷ 특히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은 변경된 재위탁 평가기준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위탁 대상자인 ★★ 보육재단이 2018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관할지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 미이행으로 위탁해지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소속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위탁자를 재선정.

➤(조치사항) 운영지원과장 및 4개 지방해양경찰청장¹⁾은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조사업자 선정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규정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 (통보)

나. 회계 관리 실태

1)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정산관리 부적정 (통보)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와 통합

1) 운영지원과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관리지침 제4조, 제17조, 제26조 및 제27조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

□□협회가 민간해양구조대 단체상해보험모집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체결한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의 정산은 보험가입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분변동자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기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여 교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문 제 점) 2022년도 단체상해보험 가입자 9,963명 중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가입오류 등의 사유로 전체 231명 납부금액 12,824,550원(실제 중복 인원 115명, 보험 가입금액 6,402,050원)의 중복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

또한 매 년도 보험 가입 기준일 이전 해촉된 인원 38명(2020년 7명, 2022년 31명, 보험 환급 예상금액 2,121,121원)이 단체보험가입자 명단에 산입되어 보험약관에 따른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함에도 해촉자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료 2,121,121원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조치사항) 구조안전국장(수색구조과장)은 중복 및 미정산된 보험료를 조속히 정산 처리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업무에 대해 보조사업자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통보)

2) 요트대회 보조사업 계약 및 대가지급 처리 부적정 (통보)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2조 등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간접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3조의2 등에 따르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 산하 회원종목단체이며 “■■협회” 등 각 지역 요트협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소속 단체로서 설립근거 및 운영절차를 달리함.

“●●협회”의 「회계 및 계약규정」 제10조, 제58조 및 제64조 등에 따르면 소속 회계관계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소관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직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음.

○(문 제 점) 구조안전국(수상레저과)은 ●●협회가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정(8척)을 민간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과정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권한 없는 ■■협회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요트대회 운영정 임차계약서(사본)를 토대로 증빙자료만을 제출받아 임차계약 만료기한이 도래하기 전 검사절차를 생략하고 임차료를 미리 선지급하는 등 회계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최종 이체내역만을 확인하여 점검.

▶(조치사항) 구조안전국장(수상레저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업무 철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 (통보)

다. 기타

1) 보조사업 교부조건 이행관리 부적정 (개선)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3조와 통합관리지침 제 17조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결정을 통지하고자 할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 받은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추진 중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문 제 점) □□협회는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단체피복 지급 사업을 추진하여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

그런데 협회가 제출한 2021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년도 피복 지급자에 대해 당해연도 피복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부조건 변경 승인절차 없이 중복지급을 할 수 없는데도 2021년도 총 19명(금액합계 2,222,600원)의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피복(기동복)을 중복지급한 것으로 확인.

▶(조치사항) 구조안전국장(수색구조과장)은 앞으로 국고보조금 결정통지 내용에 따른 교부조건 이행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교부조건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 (개선)

2) 요트대회 임차 선박 보험가입 확인업무 부적정 (통보)

○(판단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협회가 계획 수립한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개최 계획서”의 안전관리 계획 및 경기운영정 임차를 위한 수의계약 공고서 내용 등에 따르면 요트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주최자 및 참가자와 임차운영정의 보험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문 제 점) 해양경찰청과 ●●협회는 행사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회 주최자를 포함한 참가자 및 운영요원 전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등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원상회복을 도모.

●●협회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경기운영정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로부터 보험증서를 제출받고도 임차계약된 경기운영정 총 8척 중 4척의 보험가입기간이 대회기간과 상이(1척은 보험 미가입)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

➤(조치사항) 구조안전국장(수상레저과장)은 향후 개최되는 해양경찰청이 주최하는 요트대회 행사에서 보조사업자가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 (통보)

3) 어린이집 보조금 위탁계약 체결 미흡 (통보)

○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사업 수행 중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문 제 점) 각 직장어린이집은 부족한 인건비(110목)를 보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학부모 분담금 및 기타지원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남해지방청 및 서해지방청이 소관 직장어린이집 보조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위탁운영자문비 월 1,000,000원이 포함된다.”라고 명시하는 등 당초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위탁운영자문비(210목)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가 부적절하게 체결된 것으로 확인.

그 결과 남해지방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사업자는 해당 위탁계약서를 근거로 최근 3년(2020년 ~ 2022년) 동안 총 37,200,000원을 위탁사업자의 재단본부에 위탁운영자문비(210목)로 지급 확인(서해지방청은 미집행).

➤ (조치사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기획운영과장)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기획운영과장)은 직장어린이집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통보)